

인과지도 분석을 통한 사회갈등 해소 및 통합 방안 연구

A Study of Ways of Ameliorating Social Conflict and Leading Social Integration using Causal Loop Analyses

김정기* · 박상만** · 김강훈***

Kim, Jung-Ki · Park, sang-Mahn · Kim Gang-Hoon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better approach which explains reciprocal causality associated with factors causing social conflict and improving social integration respectively. Throughout this study, there are several important implications how social conflict can be solved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government and policy makers in political sector should create an environment of social integration through political reforms by switching from vertical structure to horizontal structure and by encouraging ordinary people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olicy-making processes and political activities. In economic sector, government and stakeholder associated with a certain economic issue should induce a change in the economic environment for social integration, focusing on distribution of wealth and employment stability. In social and cultural sectors, it is necessary to solve social and cultural problems (e.g., generation gap and conflict between the young and the old, multi-ethnic families, and lack of communication) by exploring better ways to establish an altruism and to interact with each other. In psychological sectors, PsyCap(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will help ordinary people to crate positive thinking and lead to social integration. For instance, political leaders having PsyCap are able to communicate with the people and can help the people to build positive main influencing on social integration. Finally,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is required because the improvement of insufficient system is the basis for reasonable and equitable social integration.

* 원광대학교 군사학부 교수(제1저자, jungki@wku.ac.kr)

** 단국대학교 교양교육대학 초빙교수(제2저자, tkopark@naver.com)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교신저자, ironhoon@etri.re.kr)

Keywords: 사회갈등, 사회통합, 정치개혁, 경제환경의 변화, 소통환경 조성, 긍정심리자본 강화, 제도개선

(Social Conflict, Social Integration, Political Reform, Changes in the Economic Environment, Establishment of Communication Environment, Enforcemen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mprovement of the System)

I. 서론

오늘날 갈등은 개인, 집단, 조직, 사회, 국가, 국제적 수준에서 중요한 이슈를 차지하고 있다. 의견대립, 다툼, 분쟁, 대립, 분노, 반대, 적대감, 딜레마, 스트레스 등을 갈등요인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갈등을 겪는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원화 되어가는 것에 비례하여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개인과 집단 사이의 갈등 역시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변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입장이나 이해관계가 상이하고 사상과 이념 및 전통, 문화, 습관과 신념체계가 다른 인종이나 계층이 뒤섞여서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는 갖가지 형태의 갈등이 빈발할 수밖에 없다(김문조, 2007: 49; 이환범 외, 2014: 143-144). 이러한 갈등은 특정 집단의 또 다른 분열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가사회 발전의 커다란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컨대,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간적 비용뿐만 아니라 엄청난 경제적 비용 또한 지불해야하며,¹⁾ 정치적 신뢰도의 하락 등으로 리더와 사회구성원 간 불신의 문제 등을 발생시킬 것이다(한상훈, 2010; 김정기 외, 2012, 208-214; 박상만 외, 2013: 121-129; 박상만 외, 2014: 33).

많은 연구에서 사회갈등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며 단순하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현상을 다른 나라들에서 발생하는 현상과 같은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미국에서 발생하는 인종차별문제(특히, 흑인문제), 중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정치·민족·종교적 갈등문제, 유럽국가에서 발생하는 난민문제 등은 오랜 세월동안 만들어진 정치·사회·문화적 갈등에서 만들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이현송, 2010, 107-108; 임지영, 2011, 64-66; 정해조 외, 2011, 88-89; 공배완, 2013, 108-115). 반면 민주화 이후 다섯 번의 정권 교체를 거치면서도 지속되고 있는 정치적 이념문제, 경제성장의 둔화 속에 만들어진 부의 편중문제, 청년실업 문제, 사교육 문제, 주택문제, 다문화 문제 등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고통으로 작용하면서 사회갈등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김강훈 외, 2011).²⁾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갈등의 원인 및 해결방안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도적 측면으로 분류하여 설명해왔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개별적인 이론과 담론을 바탕으로 문제

1) “2010년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은 OECD 국가 중 종교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심각하며”, “사회갈등으로 발생한 경제적 비용은 연간 82조~246조원으로 추산” 된다(연합뉴스, 2013. 8).

2) 예컨대, 최근 정치·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정교과서 문제는 첨예한 정치적 이념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전세 값 폭등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 이와 맥을 같이하여 과열된 사교육 문제는 오랜 시간동안 풀지 못하는 사회·문화적 갈등의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를 인식하고 해석함에 따라 사회갈등의 유발원인을 단편적으로 설명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갈등은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연결되어 나타나는 다원성, 중첩성, 복잡성을 띠고 있음에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통합적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갈등구조의 인과관계를 정치, 경제, 사회, 문제, 제도로 분류하여 시스템 사고에 근간을 둔 인과지도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와 맥을 같이하여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를 찾고, 사회통합을 유도할 수 있는 종합인과지도와 함께 새로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긍정심리자본³⁾을 적용하려한다. 긍정심리자본에서 강조하는 네 가지 수용력(즉,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을 적용하여 새로운 사회통합을 유도해낼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1장 서론에서 연구의 의의 및 목적을 제시하였다. 제2장 이론적 고찰에서는 먼저 사회갈등에 대해 정의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를 통해서 분석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도영역의 갈등요인을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각각의 갈등구조를 인과지도로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사회통합의 정의를 간략하게 제시한 후,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갈등해소 및 통합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종합인과지도 모델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간략하게 전체적인 논문을 요약하면서,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3) 긍정심리자본(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은 긍정심리학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긍정조직행동학(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POB)에서 조직구성원의 긍정적인 행동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진 이론이다. 긍정심리자본에서는 네 가지 수용력(즉,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을 제시하고 있다. 요컨대, 긍정심리자본에서는 도전적인 과업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노력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자기효능감(또는 자신감), 목표를 향해 인내하고 필요한 순간에는 성공을 위해 경로를 설정하는 희망, 현재와 미래의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낙관주의,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낙관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II. 이론적 고찰: 사회갈등

1. 사회갈등의 정의

갈등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들이 목표의 양립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호작용할 때 나타나는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안광일, 1994. 187). 즉, 두 개 이상의 실체가 상호 화합될 수 없는 목적을 추구할 때 갈등상황이 발생한다. 학문적으로 명확한 합의가 도출된 것은 아니지만(Angell, Robert C., 1965 ; Fink, C. F., 1968; Oberschall, A., 1965; 유해운, 1997; 이정춘, 2000), 사회갈등 역시 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해관계의 불일치와 이에 따른 불만의 누적으로 기존관계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때 기존의 상태를 수정하기 위해서 발생한다(박재환, 1992: 114-117).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현대의 사회갈등은 사회가 다원화 되어가는 것과 비례해서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 더욱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상호간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상이하고, 사상과 이념 및 전통, 문화, 습관, 신념체계가 다르며, 인종이나 계층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뒤섞여서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사회갈등은 빈발하고 중첩적·복합적으로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다(유해운 외, 1997: 56; 김종길: 2005 29-30 재인용).

2. 선행연구 분석

〈표 1〉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핵심적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도적 측면에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각각의 절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사회갈등의 발생배경 및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1〉 사회갈등 요인분석

이름(연도)	갈등요인	영역
장우영, 이환범 외(2014), 박찬욱(2013), 김희곤, 한상진, 최홍석, 김도희, 강 량, 허철행 외, 문태훈(2012), 최창현 외, 이용재(2011), 박성복, 신윤창(2010), 박경미(2009), 서기주(2009), 이남영(2008), 김문조 외, 김호기, 김운태(2007), 허병도(2006), 백낙청, 김무경 외(2005), 강원택(2004), 유영욱(2003), 오수열 외(2000), 신기현(1999)	이념(이데올로기), 지역주의, 민주화, 보수 vs 진보, 여야대립(정당), 권력구조, 북한 및 남북관계, 정부와 시민사회 대립, 민주주의 미성숙, 권위적 정치구조, 지역불균형발전, 엘리트층원, 정치체제의 정당성 결여, 시민권, 정책이슈, 역사인식, 국가중심주의, 학벌주의, 지방자치, 다원주의, 정치적 이익, 지역편중, 지역패권주의, 정부 및 주민 간 대립(중앙-지방, 지방-지방, 광역-기초, 주민-주민), 지역정치인의 줄서기, 민주주의 확립	정치
이환범 외, 서문기(2014), 박찬욱(2013), 김희곤, 현진권, 한상진, 강상훈, 문태훈(2012), 박충선 외(2011), 최창현 외, 신윤창(2010), 최충익(2009), 신승배(2008), 김운태(2007), 허병도(2006), 김종길 외(2005), 오수열 외(2000)	근대화, 산업화, 신자유주의, 자유화, 시장화, 사영화, 외환위기, 국책사업, 분배구조, 소득불균형, 국가·기업운영의 불공정성, 지역격차, 노사, 임금, 고용안정, 근로조건,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노동시장 변화, 노조 조직화, 노동계급 성장, 정규직 vs 비정규직, 대기업 vs 중소기업 문제, 실업, 수출주도 성장정책, 경제환경(수도권 vs 비수도권, 도농, 탈농현상 등), 경제격차, 지역개발	경제
윤여상, 윤용택(2015), 이환범 외, 서문기(2014), 민무숙 외(2013), 박찬욱, 김희곤, 한상진, 우혜숙, 윤종한, 최홍석, 이원태 외, 문태훈(2012), 박충선 외, 조영기 외(2011), 신윤창(2010), 서기주(2009), 김문조 외, 김호기(2007), 김운태, 정다운(2006), 김종길 외(2005), 서희석(1999)	남비/빚비, 일자리 vs 복지, 양극화, 사회관계망 or 지지망 부재, 사회적 배제, 참여기회, 이익분쟁(이익 vs 이익, 이익 vs 가치), 빈부격차, 소외계층, 경제성장과 반비례의 사회격차, 이기주의, 테러, 첨단기술 발전, 인터넷/SNS, 스마트 미디어, 사이버공간의 익명성, 정보사회(정보격차, 표현의 자유, 전자감시), 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가정폭력, 고부갈등, 사회환경(언론, 주거, 의료, 교육), 인권, 사회집단 간 대립, 사회적 지체, 개발지상주의 vs 생태계 파괴, 다양한 계층의 이익표출, 거버넌스 활성화, 언론의 공정성, 갈등당사자간 전문성 불균형, 사실관계, 인간관계	사회
유봉래, 이환범 외, 서문기(2014), 장인호, 민무숙 외(2013), 박찬욱, 김희곤, 오형석, 우혜숙, 오형석, 조국현, 강 량, 전 훈, 문태훈(2012), 박충선 외(2011), 최창현 외, 서기주(2009), 이남영(2008), 조승현(2006), 김종길 외(2005), 구자숙 외(1999), 장성호(1991)	세대격차(노인, 청소년, 여성 등), 세대의식(권위주의, 공동체, 인내와 책임, 성관념 및 성차별), 세대적 정체성(역사체험), 문화충돌, 문화격차, 인권, 다문화가족(출입국, 국적취득, 결혼·출산 및 양육, 고용과 노동, 교육, 의료, 외국인범죄), 다문화 현상, 이주사회 적응노력, 결과중시 문화, 새터민, 북한 이탈주민, 집단이기주의 vs 개인주의 문화, 한국문화의 이중성, 세계화, 언론 담화(세대이슈), 문화적 전통과 가치관 차이	문화
장인호(2014), 김희곤(2013), 김재광(2010), 임도빈 외, 최승범(2009), 윤인진(2008), 허병도(2006)	전통적 법규개선, 갈등관리 시스템 미비, 분쟁해결제도 미비, 갈등영향평가, 사후적 갈등조정 시스템, 비현실적 보상법제, 노동법, 갈등시설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범협의기구 부재	제도

1) 정치영역의 사회갈등

정치적 측면에서의 사회갈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민주화 이전의 권위적 정치구조, 보수와 진보간의 갈등, 정보화와 연계된 정치적 이념의 대립, 정부와 시민간의 불신, 정치체제의 정당성 결여, 지역패권주의 등을 지적하고 있다(Funk, 2001; Hibbing and Theiss-Morse, 2002; 오수열 외, 2000; 유영옥, 2003; 강원택, 2004; 김무경 외, 2005; 문태훈, 2012; 허철행 외, 2012; 박찬욱, 2013; 최홍석, 2013; 이환범 외, 2014; 장우영, 2014).

한국사회의 갈등은 1945년 독립 이후 국가의 정체성과 정치체제 확립 및 구조형성 과정과 맞물려 나타나기 시작했다.⁴⁾ 또한 한반도의 분단 이후 한국사회는 반공이데올로기의 준거 틀 안에서 개인의 사고와 삶의 방식을 좌우하게 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보수세력과 진보세력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악순환되는 단초가 되었다(유영옥, 2003; 강원택, 2004; 김무경 외, 2005; 최영기, 2008; 박찬욱, 2013; 이환범 외, 2014; 장우영, 2014). 이러한 이념대립과 갈등의 양상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었다.⁵⁾ 특히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정착과 공고화 과정과 함께 발전하기 시작한 최첨단의 정보통신기술은 한국사회의 이념갈등의 장을 인터넷 공간으로 새롭게 이전·확장시키는 역할을 했다(김문조 외, 2007; 이원태 외, 2012). 이와 함께 천년 이상 통치이념과 생활세계 규범으로 기능을 해온 유교문화의 쇠퇴와 고도의 정보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이 가져온 온라인 참여문화는 이념갈등을 중첩적, 복합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다(이정식 외, 1993). 최근에는 상하관계를 강조하는 정부주도형 정치체제(Government)에서 수평적 관계를 요구하는 정치 환경(Governance)으로 변화하면서 정부에 대한 시민간의 불신은 사회갈등을 촉진하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Funk, 2001; Hibbing and Theiss-Morse, 2002; Kim, 2009).

한편 1961년 5·16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군부정권은 반공과 경제건설의 보수적 이념과 정치적 독단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권력을 유지하였다(김무경 외, 2005: 7-8). 이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정치체제를 변질시켜 장기 집권한 정치권력은 지역편중과 경제개발의 격차, 그리고 일련의 정치적 사건 및 선거를 통해서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결여시키는 단초를 제공하였다(오수열 외, 2000: 93).

특히 1990년대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는 정부의 국책사업과 같은 개발정책을 둘러싼

4) 즉, 해방 이후 국가형성기에 있었던 각종 정치적 사건들(신탁통치, 좌우합작운동, 단독정부수립 등)로 인해 한국사회의 좌·우 세력 간 갈등이 첨예화되었고, 그 정점에서 벌어진 한국전쟁은 민족을 분열시키고 남북갈등을 야기했다.

5) 즉, 정치권력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라는 단선적 대립구도를 넘어 다원적 이익과 가치를 둘러싼 새로운 갈등의 구조를 형성하였으며, 반공권위주의체제에서 억압되어 왔던 이념균열이 민주화된 공간에서 재구조화되기 시작하였다.

국가와 지역 간, 지역 상호간에 지역개발과 기피시설 입지 등의 문제에 있어서 주민 간, 지자체 간의 갈등으로 인해 지역갈등이 중첩적으로 표출되고 있다(최홍석, 2013: 109).

2) 경제영역의 사회갈등

수출주도의 성장정책과 자본의 분배구조의 모순, 국가·기업운영의 불공정성, 노사문제 등은 산업화 및 이후 진척된 세계화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측면의 사회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Corak, Miles, 2013; OECD, 2013; 허병도, 2006; 김윤태, 2007; 박현미, 2009; 박충선, 2011; 강상훈, 2012; 김희곤, 2012; 현진권, 2012; 서문기, 2014; 이환범 외, 2014).

우리나라의 산업화 초기 경제발전의 방향은 국가중심의 산업육성이었다. 그 결과 국가중심의 산업구조 형성과 독점자본가(재벌)와 결합한 산업의 성장이라는 경제환경은 분배구조의 모순 속에서 소외된 이들과 기득권계층 간의 갈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신윤창, 2010; 서문기, 2014: 39; 이환범 외, 2014: 150)⁶⁾. 문제는 각 계층들이 서로 다른 이익을 표출함으로써 갈등의 형태가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박찬욱, 2013: 65-66; 이환범 외, 2014: 150-151)⁷⁾.

경제영역의 분배구조 모순을 통해서 나타난 또 다른 형태의 갈등양상은 노동계급의 성장과 노조의 조직화, 비정규직 문제와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와 함께 발생했다. 그리고 한국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자본주의는 노·사간의 상반된 이해관계(임금, 환경조건 등)의 지각을 통해서 다른 집단이 자기집단의 이익을 방해할 것이라는 공동의 믿음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형태로 노·사갈등을 구조화하였다(강상훈, 2012: 44-50; Corak, Miles, 2013; OECD, 2013). 그 결과 한국사회는 노동시장에서의 빈부격차, 비정규직 증가, 제3국으로의 자본이동, 성과급체계 등과 같은 새로운 경제체제에 대한 요구와 구조개편으로 인해 노·사 간 갈등의 중첩성, 복합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허병도, 2006: 5; Wilkinson & Pikett, 2009). 문제는 이렇듯 경제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계층갈등과 노사갈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협의기구나 조정장치가 부재 및 미비한 상태에서 한국사회에 대한 불만은 확산되고, 사회구조 변화요구와 맞물려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이 고착화

6) 산업화 이후 경제부문의 분배구조의 불평등은 계층갈등이라는 악순환 구조의 단초가 되었다. 한국사회의 계층구조를 보면 자본가 계층, 신중간 계층, 구중간 계층, 노동자 계층, 농민, 도시 하류계층 등 여러 층으로 분화되어 있다.

7) 특히 외환위기 이후 확대된 소득의 양극화 현상은 계층 간의 갈등을 더욱 확대시켰다. 이러한 계층 간의 이익에 대한 경쟁의식과 양극화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피해의식은 한국사회의 불신구조를 심화시켜 사회불안의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되고 있다는 것이다(허병도, 2006: 43-44; 박현미, 2009: 79-82).

3) 사회·문화영역의 사회갈등

사회적 소외감, 참여기회의 불균형, 집단이기주의, 정보통신기술의 진척에 따른 정보화 격차, 언론의 공정성 부재 등은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신윤창, 2010; 문태훈, 2012; 민무숙 외, 2013; 이환범 외, 2014; 윤여상, 2015; 윤용택, 2015). 또한 세대·성별의 격차 문제와 함께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출산 및 양육, 교육, 고용과 노동 등의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갈등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조승현, 2006; 이남영, 2008; 오형석, 2012; 서문기, 2014, 장인호, 2013; 유봉래, 2014; Kymlicka, 2005a, 2005b).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의 후유증으로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소외된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의 고조는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사회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병량, 2008: 60-61; Kymlicka, 2005a, 2005b). 또한 1987년 이후 민주주의체제의 공고화과정에서 발생한 참여기회의 불균형을 우리사회의 갈등구조를 야기한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Kim, 2009).⁸⁾

우리나라는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적 집단주의 및 연고주의가 이기적 개인주의와 결합되면서 집단적 이기주의를 출현시켰다.⁹⁾ 집단적 이기주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협동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나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주장하는 이기적 개인주의자의 수가 많아질 때 집단적 이기주의는 강화된다(최장집, 2005). 즉, 도덕과 가치, 삶의 잣대가 이중적으로 작동할 때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 보다는 집단적 이해관계로 뿔뿔 뭉쳐 세를 과시하는 집단행동이 집단적 이기주의를 만든다. 이러한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때 사회영역에서의 사회갈등은 더욱더 심화 될 수밖에 없다.

정보사회 진척에 따라 세대갈등은 산업화 시대(개략적으로 1990년 이전)와 현재의 세대 간 차이로 확대되고 있다(김종길, 2005: 38, 52; 이원태 외, 2012: 25; Fink, 1968; Daalder, 1974; Steiner, 1981).¹⁰⁾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난 개인주의 성향은 창의력과 독창성의

8) 민주주의는 시민의 자치(self-rule)에 의한 정부라 할 수 있다. 즉, 시민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여 그들의 이해를 조정하며 정책결정을 하는 정치제도이다. 하지만 정치·사회적 참여의 불균형은 민주주의체도의 기틀을 흔들어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갈등구조를 더욱더 심화시킬 것이다.

9) 집단적 이기주의는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현상 또는 핼피(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으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

10) 산업화 시대에는 세대 간 갈등관계가 형성되어도 기성세대가 지니고 있던 가치들이 우선시되고 이를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 구조 속에서 약간 반항하는 수준에서 갈등의 수준이 약화되었다. 하지만 정보화 시대에는 산업화 시대의 갈등해결의 기제가 여러 요인으로 인해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기반이 되며, 이것은 권위에 대한 순종보다는 도전과 문제제기를 통해서 튀는 인간형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다(백옥인, 2000; 신운창, 2010: 135-136 재인용). 또한 위계서열보다는 독창성이 중시됨으로써, 기성세대의 가치관보다 정보화 세대의 가치관이 우선시되고 이를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관계의 변화는 세대 간의 정보 접근, 정보이용, 정보점유의 격차를 더욱 커지게 하여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백옥인 역, 1999; 윤옥경, 2000; 신운창, 2010: 136 재인용).

언론의 공정성부재는 사회갈등 및 통합을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언론은 여론과 정치적 쟁점을 결정하고 확대시키는 중요한 매체로서 사회갈등의 성패를 결정지우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언론은 갈등의 쟁점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피상적인 생각을 전파시켜 여러 각도에서 공공의 일에 자신들이 직접 참여하여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조성할 수 있다. 하지만, 편향적인 언론보도 등은 또 다른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김병진, 2001; 박근수, 2005).

세계화의 거버넌스 환경 속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또 다른 갈등으로는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 등 다문화 현상과 연관된다.¹¹⁾ 즉, 한국사회의 다문화 갈등은 먼저 전통적인 갈등요인인 언어, 인종, 문화의 차이로 인한 구성원들간의 이질감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¹²⁾ 특히 다문화 사회에서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망의 부재와 제도적 장치의 미비는 불신의 사회구조 형성을 가속화 시킬 것이다.

4) 제도영역의 사회갈등¹³⁾

제도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회갈등 구조는 어느 특정의 갈등차원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닐 것이다. 본 절에서는 환경문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제도영역에서의 사회갈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갈등관리 시스템의 미비, 분쟁해결제도의 미흡, 비현실적인 보상제도 등은 제도적 영역에서의 사회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Hayden, 2006; 허병도, 2006; 윤인진, 2008; 임도빈 외, 2009; 김재광, 2010; 김희곤, 2013; 장인호, 2014; 김희곤, 2013; Davis, 1989; Scanlon, 2005; Menkel-Meadow, 2007).

11) 예컨대, 새터민의 경우 이질적 체제 환경에 대한 적응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즉, 한 민족이만 새터민을 부정적인 시각과 이질감은 그들의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의 조정기구나 비현실적인 지원정책은 피해의식을 더욱 높이고 있어 사회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다.

12) 한국사회는 유교적 전통을 바탕으로 단일민족이라는 민족주의적 사고를 오랫동안 지속시켜 왔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질감의 극복은 상당기간 어려울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10; 라문휘, 2011, 50).

13) 제도영역에서의 사회갈등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과 연계하여 살펴보아야 하나, 본 연구에는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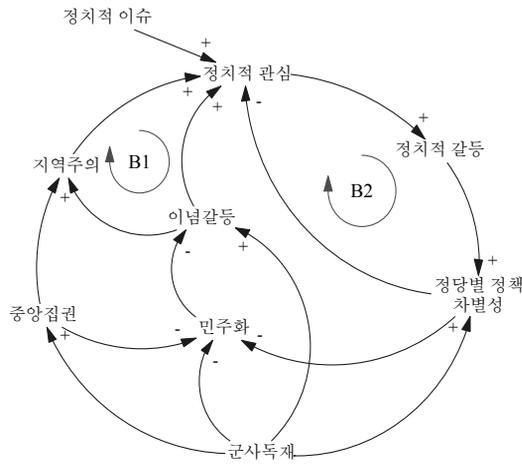
세계화의 거버넌스 환경 속에서 부각되고 있는 사회갈등 요인으로 대두된 환경문제는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에 대한 참여기회의 확대와 생태계에 대한 관심 및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Hayden, 2006). 즉, 환경갈등은 환경인식과 가치관 차이, 각종 정책의 소득 재분배에 따른 이해관계, 과도한 개발행위, 국민의 환경위험도에 대한 이율배반성 등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5: 101-102; 김도희, 2013: 2).¹⁴⁾

환경문제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의 참여 결여로 인한 비민주적 의사결정, 개발에 따른 편익수혜자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비용 부담자 간 비형평성 문제, 기술적 결함과 적성성에 대한 신뢰성 결여,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에서 연유된 심리적 불안감과 문화적 거부감,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의 문화 미숙, 시민사회의 역할 등의 부재로 인해 환경갈등의 해소를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개발과 생태계 보전 논리에 대한 정치적 고려와 같은 비합리적 행위는 환경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행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절차적·제도적으로 확충되어 있지 못한 시스템과 법규의 미비 및 결여는 한국사회의 갈등구조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조승현 외, 2006: 184-185; 허병도, 2006: 43-44; 유욱, 2008: 226; 박현미, 2009: 79-82; 조영기 외, 2011: 272-276).

III. 인과지도 분석

사회갈등의 유발원인에 관한 다섯 가지 접근 시각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사회통합방향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개별적으로 4개의 인과지도를 작성하였다. 각 인과지도는 앞서 소개한 4가지 접근 시각별 선행연구의 논리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객관화된 분석을 위해 별도의 변수와 연결은 최소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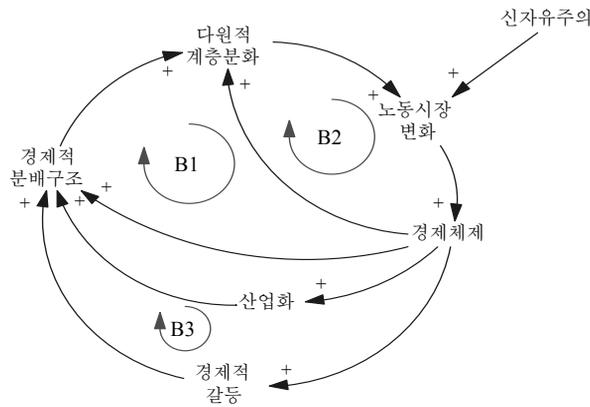
14) 한국사회는 '경제개발'과 '환경보호'라는 가치를 놓고 1980년대 후반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예컨대, 온산공단, 시화·반월공단, 영월댐 건설, 부산시 신평 산업폐기물 소각장, 최근 제주강정마을과 진주 고압선철탑반대 시위 시례 등 우리사회에서 가장 극단적 대립을 보인분야 중 하나가 개발과 환경논쟁이다.



[그림 1] 정치영역의 갈등에 관한 인과지도

[그림 1]은 정치적 영역에서의 갈등유발에 관한 선행연구의 접근 시각을 인과지도로 간략하게 정리했다. 즉, 군사 독재는 정당별 정책의 차별성과, 중앙집권, 이념갈등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김강훈 외, 2011). 또한, 이념의 갈등과 정당별 정책의 차별성의 증대는 국
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약화시켜 정치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정(+)
의 관계를 갖는다. 강력한 중앙집권의 정치체제는 지방분권화를 약화시키며, 이는 국민들의 정치적 불신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 이는 지역패권주의의 형성 등 또 다른 정치적 갈등을 발생시킨다. 군사독재에 반
하는 민주화의 진전은 이념갈등 및 지역주의와 부(-)
의 관계를 가지면서 오히려 정치적 관
심을 저하시키고 이로 인해 또 다른 사회갈등으로 이어진다.

아래의 [그림 2]는 경제적 영역에서의 갈등유발에 관한 선행연구의 접근 시각을 인과지
도로 간략하게 정리했다. 즉,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경제적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산업화 이후 경제부분의 분배구조 불평등으로부터 시작된다. 경제적 분배구조의 불평등은
다원적 계층구조(즉, 자본가 계층, 신 중간계층, 구 중간계층, 노동자 계층 등)를 만들어 계
층 간의 갈등구조를 형성시킨다. 이러한 다원적 계층구조의 형성은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확산과 함께 노동시장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정(+)
의 관계를 갖는다. 이는 비정규직 증가,
제3국으로의 자본이동 등 경제체제에 정(+)
의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적 영역에서의 갈등구
조를 심화시킨다. 이러한 경제체제의 변화는 경제적 분배구조와 다원적 계층분화를 가속화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사회갈등구조를 더욱더 공고히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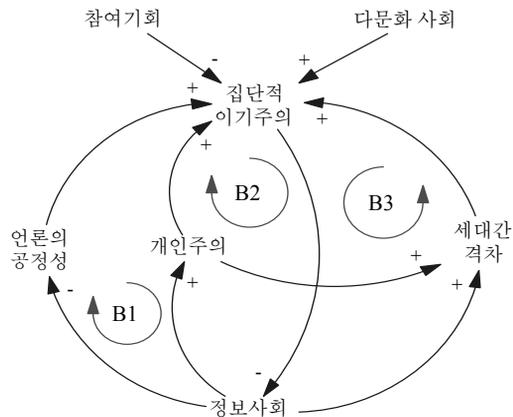
[그림 2] 경제영역의 갈등에 관한 인과지도

아래의 [그림 3]은 사회·문화영역에서의 갈등유발에 관한 선행연구의 접근 시각을 인과지도로 간략하게 정리했다. 즉, 정보사회의 진척과 함께 소셜미디어의 이용 증가는 세대 갈등의 원인이 되며, 세대 갈등은 다시금 집단적 이기주의문화를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¹⁵⁾ 또한 정보사회의 진척과 함께 소셜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면서 개인주의문화와 정(+)의 관계를 만들며 개인주의문화의 확대는 집단적 이기주의를 증폭시키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¹⁶⁾ 정보사회에서의 스마트 미디어의 등장은 사회 이슈에 관한 의제설정기능이 기존의 언론매체에서 개인이나 대안 언론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언론의 공정성이 위협을 받으며 집단적 이기주의문화를 형성하면서 사회갈등을 유발시킨다. 이와 맥을 같이하여 다문화가족의 양적 증가로 인해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면서 ‘다문화 갈등’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이슈가 등장하고 있다.¹⁷⁾ 다문화 사회의 등장은 언어, 인종, 문화 등의 차이로 기존의 구성원들 간의 이질감을 형성하며 집단적 이기주의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15) 세대란 용어는 한 생명이 태어나 자신의 다음 생명을 잉태하기까지의 생물학적 기간을 의미한다. 세대라는 용어 속에는 시대적 간격을 지니고 등장하는 서로 다른 집단이라는 상대적 의미를 내포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세대라는 용어는 ‘어느 집단과의 공통점과 그 밖의 다른 집단과의 차이점’이란 의미가 아울러 내재되어 있다(Nash, 1978; 박재홍, 2003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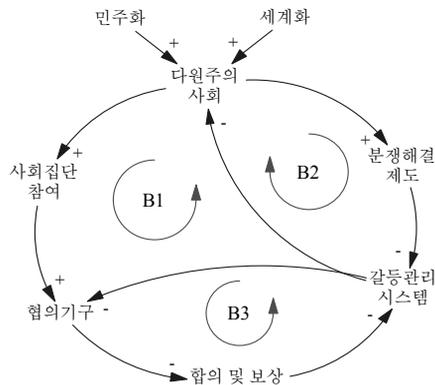
16) 융합 미디어 이용자 간에 억제되지 않은 정보의 이동과 필터링 되지 않은 즉각적인 의사소통에 의해 왜곡된 정보와 그릇된 가치관과 사고, 행동방식을 전 사회에 확산시킬 위험성도 다분하다. 예컨대, 소셜 미디어 시대에는 정보격차, 갈등의 파편화, 쟁점의 확산, 프라이버시 침해 심화 등으로 인해 갈등의 잠재력이 한층 더 커지고 복잡해진다(이명진 외, 2009).

17) 다문화 사회란 주류사회의 구성원들이 외부집단이나 이주자들에게 민족적·문화적 다양성이 의미 있게 부각된 사회로 언어, 종교, 관습, 가치관, 국적, 인종, 민족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 등이 사회적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진 사회를 말한다(장지표, 2008; 김중관, 2014 재인용).



[그림 3] 사회·문화영역의 갈등에 관한 인과지도

아래의 [그림 4]는 제도적 영역에서의 갈등유발에 관한 선행연구의 접근 시각을 인과지도로 간략하게 정리했다. 민주화와 세계화로 인해서 진척된 다원주의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참여의 문제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하는 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제도의 영역에서 분쟁해결제도의 미비와 부재는 갈등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조정하는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부(-)의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러한 영향은 다양한 집단의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기구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합의도출과 적절한 보상의 문제를 어렵게 하는 부(-)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과적으로 다원주의사회에서 참여의 문제와 적합한 제도의 부재는 갈등해소를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림 4] 제도영역의 갈등에 관한 인과지도

IV. 사회통합을 위한 해결방안

1. 사회통합의 정의

사회통합의 개념 역시 학자들의 여러 시각과 관심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를 찾기는 어렵다(Chan, J. · To, H. Chan, E. 2006: 273-302). 전상인(1996: 241)은 “사회의 분화, 이질화, 분리, 차별, 불평등을 전제로 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동질화와 조화의 과정”이라고 했다. 노대명(2009)은 “개인들이 사회에 맞게 조정하려는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다양한 개인을 수용하려는 노력을 의미하며, 사회의 통상적 기준에서 동떨어진 개인일지라도 그들이 사회 규범을 수용하고 잘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그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과 관용성을 높여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을 “단기간에 평가할 수 없는 장기적인 과정(이용일, 2007: 223)으로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뿐만 아니라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노대명, 2009: 6-19)”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정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회통합은 결과적 측면보다는 과정 속의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소할 것인가에 관심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사회통합을 위한 선행연구 분석

〈표 2〉는 사회통합을 유도할 수 있는 핵심적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도, 심리적 측면에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표 2〉 사회통합 요인분석

이름(연도)	통합요인	영역
유병래(2015), 장우영, 김중관, 박상만 외(2014), 박찬욱(2013), 한상진, 최홍석, 허철행 외, 문태훈(2012), 허철행 외, 박충선 외, 김정기 외(2011), 임도빈 외(2010), 이남영(2008), 김문조 외(2007), 김윤태, 백낙청(2006), 김종길 외(2005), 김무경, 오수열 외(2000), 신기현(1999)	정치구조 개편, 정당 및 국회운영 쇄신, 선거제도(선거운동, 선거구제) 개선, 공정한 인사정책, 청렴성, 정치참여, 리더십, 권리증진, 정부·지자체의 효율적 통합서비스 지원, 협치, 협의민주주의, 국가비전 수립, 정치적 편향성 제거, 포용의 민주주의, 민주적 의사결정, 참된 중도(中道), 지역주의 탈피, 시민성 구현, 다원적 민주주의 실현, 참여민주주의, 갈등이슈사업 속의·절차·정당한 처리, 균형발전정책, 지방행정구역개편, 전국정당화, 낙천낙선운동, 정부의 적극적 의지, 정책사업 추진의 명료성, 정부의 갈등중재 노력, 분권화, 정치적 영향력 배제	정치

김중관, 서문기(2014), 현진권(2013), 윤종한, 강상훈(2012), 문태훈, 오수열 외(2000)	지속가능한 발전, 부 축적의 정당성, 성장전략의 재검토와 수정, 경제비용 낮은 세금과 복지 선택, 자발적 자선과 봉사, 노동력 장기 수급관리, 고용안정성, 노사공동체 형성, 경제 교류와 협력, 조세 재분배, 자원배분의 공정성과 합리성 확보	경제
윤여상, 윤용택(2015), 유병래, 이환범 외, 서문기(2014), 장인호, 김중관, 우혜숙, 박찬욱(2013), 민무숙 외, 한상진, 오형석, 변중현, 오형석, 강 량, 조국현, 김도희, 한상운(2012), 이용재, 조영기 외, 이원태 외(2011), 금창호(2010), 신윤창, 서기주(2009), 최승범, 박경미, 최충익 외, 김호기(2007), 김운태, 정다원(2006), 조승현, 김종길 외(2005), 유영옥(2003), 오수열 외(2000), 장성호(1991)	개방적 의사소통 채널, NGO, 거버넌스(참여, 토론, 지속적인 정보생산과 정보교류, 정책협의체 구성), 지도층의 공정사회 만들기, 사회관계망, 생활만족도, 사회적 합의, 인적자원 개발, 인권존중, 취약계층 보호정책, 공공선, 외국인 범죄 예방, 토론, 타협, 소통, 다양성 인정, 사이버공동체 구현, 신뢰메커니즘 구축, 정보공유, 공공성 강화, 사회협약, 사회적 투자, 시민사회 대표성 제고, 생활공동체 성원권, 범죄예방 활동, 세대 상보·상생, 자극적 선전·선동 지양, 언론의 공론적 역할, 언론의 상호 보도교류, 홍보효과 제고위한 언론계의 적극 참여와 역할, 평생학습 교육, 적극적 복지	사회
유병래(2015), 이환범 외(2014), 민무숙 외(2013), 오형석, 강 량, 이용재(2011), 금창호(2010), 이부하, 박현미(2009), 김문조 외(2007), 김종길 외(2005),	신뢰문화 형성, 문화이해, 협상·합의문화, 문화예술 장려, 상호작용 문화형성, 문화정책성 확보, 배려문화 정립, 교류 확대, 디지털 세대문화 이해	문화
장우영, 이환범 외, 서문기(2014), 장인호, 민무숙 외(2013), 김희곤, 현진권, 김도희, 심준섭 외, 전 훈(2012), 한상훈, 이원태 외, 허철행 외, 금창호(2010), 신윤창, 임도빈 외, 김재광, 최돈민(2009), 박현미, 윤인진(2008), 김호기(2007), 허병도(2006), 김종길 외(2005), 신기현(1999), 서희석, 장성호(1991)	법·제도정비, 제도(사회적 분배 정의 실현, 이해관계자 수용성 증진), 교육프로그램,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도입, 다문화가족 기본법 개선, 갈등예방·관리 지원 시스템 구축 및 민주적 운영, 공생·상생발전 위한 법제화, 환경법제 구축, 사회적 합의시스템 정착, 노동법원 도입, 노동위원회 제도 보완, 사적조정중재제도, 고충처리제도, 갈등관리체계 구축, 갈등영향평가, 사회갈등완화 기본법 제정, 갈등조정위원회 등 법률정비, 개방적 공론과 협치 구현 독립기구 제도화, 전문가 위원회, 균형발전 법규강화, 제3자 개입 갈등조정	제도
윤용택(2015), 박상만 외(2014), 박찬욱, 박상만 외(2013), 김정기 외(2011)	긍정심리자본(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 등), 동질감, 긍정적 정서, 자기개발, 개인의 성숙한 인격(인성, 공동체의식), 포용의식, 신뢰, 자아인식, 자기개발, 윤리의식, 비전공유, 상생, 공익의식, 공감, 긍정대화, 통합사고, 정서적 안정감	심리

선행연구를 통해서 각각의 영역에서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핵심적 요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치구조 개혁, 정당 및 국회운영의 쇄신, 선거제도 개편,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개선,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강화 등을 정치적 영역에서의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Gang-Hoon Kim, 2009; 이남영, 2008; 김정기 외, 2011; 박상만 외, 2014; 유병래, 2015; 신윤창, 2010; 허철행,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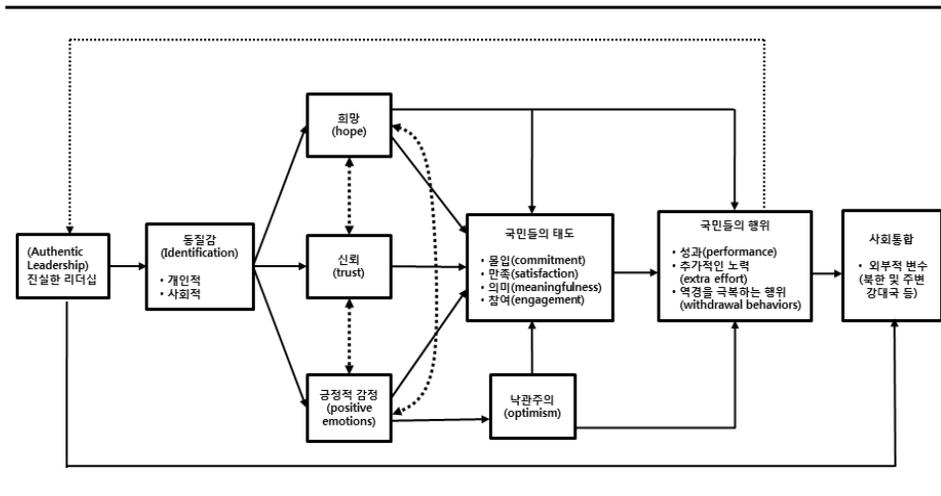
많은 학자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수립 및 시행, 경제적 부의 축적에 있어서 정당성 회복, 경제비용이 낮은 세금과 복지의 선택, 고용안정성 마련, 노사공동체 형성 등을 경제영역에서의 갈등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서문기, 2014; 강상훈, 2012; 윤종한, 2012; 문태훈, 2012; 현진권, 2013; 김중관, 2014).

사회·문화영역에서의 갈등해소 방안은 상대적으로 타 영역에 비해 더 다원적이고 중첩성을 띠고 있으며, 특히 복잡한 연계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개방적인 의사소통 채널의 강화, 거버넌스적 참여구조 확대, 인적자원 개발, 사이버공동체 구현, 언론의 공론적 역할, 인종 간 신뢰문화 형성, 세대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소통채널 확대 등을 사회·문화적 갈등을 해소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안하고 있다(금창호, 2010; 오형석, 2011, 강량, 2011; 장인호 2013; 민무숙 외, 2013; 유병래, 2015; 윤여상, 2015).

최근에는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해결방법으로 개별적·집단적 긍정심리자본의 강화를 통한 사회적 갈등관계 해소를 강조하고 있다(김정기 외, 2011; 박상만 외, 2013, 2014). 예컨대, 리더와 일반국민들 간의 동질감의 강화와 상호신뢰감의 회복을 통해 긍정심리자본의 근간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통합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¹⁸⁾

아래의 [그림 5]는 리더십을 통한 사회통합의 모델이다. 모델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진실한 리더는 국민들과의 동질감을 형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호 신뢰감을 높여 긍정적인 사회문화를 구축해간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국민들이 리더와 정부를 바라보는 태도가 변하고, 국민들의 사회적 행위가 바뀌게 된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으며, 이는 국가발전에 초석이 된다.

18) 심리적 자본을 강조하는 긍정심리학자들은 약점을 파악하는 것만큼 강점을 살리고, 최악의 것을 개선하는 만큼 최선의 것을 확립해야 하며, 고통 받는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해야 하는 만큼 건강한 사람들의 삶을 충족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Peterson & Seligman,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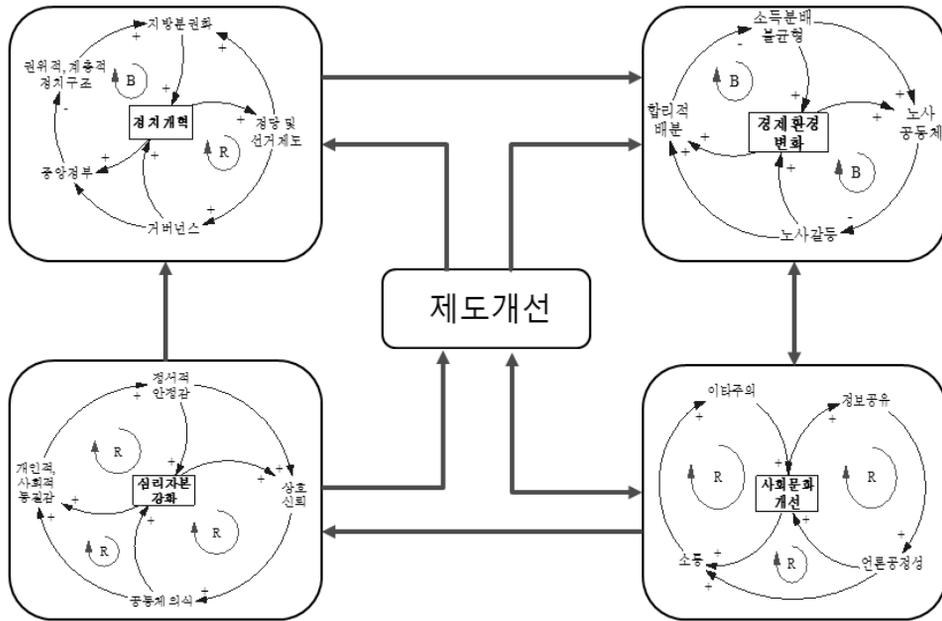


[그림 5] 진실한 리더십을 통한 사회통합 모델

마지막으로, 제도적 측면에서의 갈등해소 방법으로는 법·제도정비, 대체적 분쟁해결제
 도(ADR) 도입, 전문가 위원회 활성화, 사회적 합의 시스템 정착 등을 지적하고 있다(박현
 미, 2008; 신운창, 2009; 김재광, 2009; 한상훈, 2010; 이원태 외, 2010; 전훈, 2012; 심준섭,
 2012; 장인호, 2013; 이환범 외, 2014; 장우영, 2014). 다음 절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도출한 주요요인을 바탕으로 종합인과지도를 제시하면서 사회적 갈등해소와 통합을 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갈등해소를 위한 종합인과지도

본 절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유도할 수 있는 핵심
 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종합인과지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
 이 4개의 개별적인 접근(즉, 정치개혁, 경제 환경변화, 사회·문화개선, 심리자본 강화) 시
 각을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하나의 통합된 사고 속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갈
 등에 대한 단편적인 문제 인식과 사회통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
 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6] 사회통합을 위한 종합인과지도 모델

1) 정치영역의 사회통합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가 바탕이 된 거버넌스형 정책결정시스템을 구축하는 정치개혁은 수직적이며 권력집중적인 중앙정부시스템을 변화시킨다(Funk, 2001; Hibbing and Theiss-Morse, 2002). 중앙정부 시스템의 변화는 국가중심의 권위적·계층적 정치구조의 변화를 촉진시킨다(오수열 외, 2000: 106-109; 강원택, 2004: 56-57; 장우영, 2014: 54). 예컨대, 엘리트 충원과정에서 나타나는 편중적인 인사시스템을 경쟁적 구조로 전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단행되어야 한다.¹⁹⁾ 이러한 변화는 고질적인 지역적·계층적 권력구조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중앙집중형 권력구조의 변화는 안정적인 지방분권화와 정(+)의 관계를 갖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한 정책사업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항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 지방의 자립도 및 자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조치와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신운창, 2010; 이환범, 2010; 허철행 외, 2012). 요컨대, 정치개혁을 통한 중앙정부의 역할의 변화와 수평적 정책결정구조 확립, 그리고 독립적인 지방분권화는 안정적인 균형루프를 형성하며 정치영역에서의 사회적 통합을 유도할 수 있다.

19) 최근 박근혜정부가 보여준 편중적인 인사(예, 검찰청장, 경찰청장 등)는 정치·사회갈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치영역에서의 사회통합을 위한 또 다른 선결적 해결방안으로 정당 및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김무경 외, 2005: 24-26; 신윤창, 2010: 125-126). 예컨대, 선거제도 개혁 측면에서 전면적인 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할 경우 공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선거구 조정과 정당지지기반의 비례대표제 확대 등은 공고화된 정치민주화를 달성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²⁰⁾ 이와 함께, 정당 내부에서도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시키는 방법과 같은 제도정비를 통해서 다양한 가치를 가진 사회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참여시켜 제도권에 반영시키는 상생의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박경미, 2009: 128-129; 박찬욱, 2013: 86-90). 선거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의 구축은 수직적인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거버넌스형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화를 유도하며, 중앙집권형 정치구조를 개혁할 수 있다. 요컨대, 정당 및 선거제도의 개혁은 수평적인 거버넌스형 정치환경을 마련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내는 균형루프를 형성한다.

2) 경제영역의 사회통합

공정하고 투명한 게임의 법칙이 작동되는 경제환경 속에서 부의 축적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평가와 합리적인 분배의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토양을 갖추어야 한다. 예컨대, 불로소득과 같은 비합리적 기제를 차단하고 조세제도의 재분배효과를 강화함으로써 자산불평등의 양극화 현상과 분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다(서문기, 2014: 46-49). 합리적인 배분과정에서 노동자, 소비자, 공급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합리적인 의사결정 환경을 제공하는 경제민주화의 제도적 확립은 소득의 양극화 현상과 같은 갈등요인을 해소할 수 있다. 이는 공동체적 경제구조의 기초가 되며, 이러한 공동체적 가치는 노사 간의 갈등구조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자원의 배분을 만들어 내는 선순환적 연계성을 담보한다.

한국사회의 노사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한국형 고충처리제도 마련과 근로감독관의 역할 제고, 노동법원 도입 검토, 노동위원회 제도 보완, 원칙 없는 정치 및 경제논리 단절 및 법질서 확립, 사적조정중재제도 활성화 등의 조치와 제도의 확충은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노사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산업 평화적 노사관계와 상생의 노사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통합의 기반이 된다(허병도, 2006: 31-42; 박현미, 2009: 80-81; 강상훈, 2012: 61). 요컨대, 합리적 배분은 불균형적인 소득분배와 부의관계를 가지면서 사회적 안정을 피하는 균형루프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노사공동체의 형성은 노사갈등과 부의관계를 형성하면서

20) 이러한 결과로 현재 강한 양당제(예, 새누리당 vs 새정치민주연합) 구조가 해체되고,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것이다.

안정적인 균형루프를 형성하면서 경제영역에서의 사회적 통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

3) 사회·문화영역의 사회통합

사회·문화영역에서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개인과 집단 사이의 상호이해와 거버넌스형 개방적인 소통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²¹⁾ 이러한 소통문화는 상호간의 이타주의를 형성하는 근간을 제공하며, 갈등의 연계 고리를 단절시켜 새로운 소통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제공하는 선순환적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 예컨대,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족, 그리고 새터민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문화 현상의 해결방안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 및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이타주의와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조정기구 설립과 현실적 지원정책 강화, 경제적 배분에 있어 형평성 고려, 사회·문화적 차별의식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및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사회적 지지망을 확충해야 한다(이용재, 2011: 98-100; 박충선 외, 2011: 143-144; 변중현, 2013: 51-52; 오형석, 2013: 111; 우혜숙, 2014: 51-52; 유병래, 2015: 137-138).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산업화 이후 발생한 가족관계의 변화는 세대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건을 바로 이해하고 상호 교감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정성호, 1991: 301-302; 신윤창, 2010: 135-136; 강량, 2013: 265-274). 예컨대, 사회적 경험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체험장 운영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유병래, 2015: 170).

정보사회의 도래를 통해 다양한 정보사용 유무에 따른 정보접근, 이용, 점유 등과 같은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사회·문화영역에서의 사회통합의 선결과제로 지적하고 있다(신윤창, 2010: 136; 유병래, 2015: 142-143). 이를 위해서는 정보공유를 위한 사이버공동체 구축과 함께 개방·감성·창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청년세대에 대한 이해와 기성세대에 대한 배려의 문화형성이 필요하다(강량, 2014: 272-274). 이와 함께 언론의 공론적 역할은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박근수, 2005). 또한 언론은 여론과 정치적 쟁점을 결정하고 확대시키는 중요한 매체로서 사회갈등의 성패를 결정짓는 역할을 한

21) 소통을 영어로 'Communication'이라 한다. 'Communication'의 의미가 생성된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라틴어의 동사 'Communicare'에서부터 추정한다. 커뮤니카레라(Communicare)는 라틴어의 의미는 영어로 'to make common'이라는 뜻이다. 즉, 공통적인 부분을 만든다는 의미이다. 사실상 16세기경에는 영국에서 'Common'이라는 단어를 'Communication'이라는 단어와 같이 사용하였다. 결국, 'Communication'의 의미는 무언가 공통적인 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 행위, 관계 등을 통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김정기 외, 2011).

다. 따라서 언론은 사실을 자유롭고 공정하며 객관적으로 보도하여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한다(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2011). 요컨대, 상호간의 소통과 이타주의 문화 정착, 올바른 정보사용, 그리고 언론의 공정성이 선순환적 연계성을 가진다면 사회·문화적인 환경에 건강성을 제공할 것이다.

4) 심리적 측면에서의 사회통합

우리사회 내에서 심리자본(특히, 긍정심리자본)의 강화는 사회적 문제해결과 통합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긍정심리자본에서 강조하는 네 가지의 수용력(즉,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은 리더와 국민, 그리고 집단과 집단의 동질감의 형성과 정의관계를 갖는다. 예컨대, ① 정부가 국민들 개개인이 도전적인 과업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취하고 쏟아 부을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할 때, ②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재와 미래의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낙관주의를 만들어 갈 때, ③ 국민들 개개인이 목표를 향해 인내하고 필요한 순간에는 성공하기 위해 목표(희망)에 대한 경로를 재설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때, ④ 국민들 개개인이 성공을 위해 어떤 문제나 역경에 직면했을 때 이를 참고 견디며 난관이나 좌절로부터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거나 그것을 뛰어넘어 회복력을 조성해 줄 때 개인적·사회적 동질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김정기 외, 2011. 122-123). 개인적·사회적 동질감의 형성은 국민들의 정서적 안정감을 만들어 사회적 안정을 만들어내는 강화루프를 형성한다.

긍정심리자본의 사회적 확대는 국민들의 상호신뢰를 만드는 촉매제역할을 하면서 공동체의식을 더욱더 공고이하는 강화루프를 형성한다. 예컨대, 국민들 간의 상호신뢰의 형성은 국민들의 태도(예, 적극적인 사회적 참여)와 행위(예, 각자가 처해있는 역경을 극복하는 노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정기 외, 2011). 이와 함께 공동체의식은 개인적·집단적 동질감 형성에 정의 관계를 가지며, 사회적 동질감 회복은 개별적·집단적 정서를 안정시키는 정의 관계를 만들고, 이는 상호신뢰를 형성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5) 제도적 측면에서의 사회통합

마지막으로, 앞에서 지적한 정치개혁, 경제 환경 변화, 사회·문화 개선, 그리고 심리자본 강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제도는 개인과 집단의 합의적 문화와 신념의 형성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며(Hayden, 2006),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심리적 변화를 이끌어 낸다(김정기 외, 2011; 박상만 & 김강훈, 2014). 특히 건강한 심리자본은 정치개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

용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치개혁은 이분화 된 경제 환경을 개선시킨다. 공정한 소득분배와 노사갈등의 해소, 언론의 공정성, 소통문화의 정착 등은 제도개선에 필요한 근간을 제공하며, 이는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구현시킨다. 중요한 것은 사회구성원은 이러한 시스템에 협력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갈등완화에 임해야 하며, 자신이 속한 집단과 조직, 지역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보다는 한국사회 전체의 공공선을 지향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휘문, 2011: 56-59; 서문기, 2014: 46-49).

V. 결론 및 시사점

우리는 갈등 속에서 살아간다. 특히 정치 환경의 변화, 사회·문화의 다변화, 정보사회의 발달 등으로 인해 갈등발생의 주체와 범위가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 예컨대, 수직적 정치구조에서 수평적 정치구조(즉, 거버넌스형 정치구조)로 변화되면서 정부와 시민사회 간 대립이 심화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 중첩적으로 재구조화 되는 등 정치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과 이후 세계화를 통해서 발생한 부의 불균형 및 노사 간의 갈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다수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영역에서 비롯된 갈등뿐만 아니라 정보사회 진척에 따른 세대 간의 정보격차, 다문화 가족형성에 따른 인종적·계층적 갈등은 한국사회가 선결적으로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갈등의 발생요인과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갈등을 유발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단선적 인과성(one way causality) 검증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선형구조의 관계를 통해서 복잡한 사회현상(예, 사회갈등)을 설명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인과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갈등의 요인들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서 갈등구조의 전체적인 상호인과관계(reciprocal causality)를 분석하였다.

정리하면, 인과지도 분석을 통해서 사회갈등 구조를 살펴본 결과, 기존의 연구방법으로는 통괄적인 갈등해소 및 사회통합의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복잡한 요인들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통괄적인 시스템 구조를 제시하였다. 특히 사회통합의 행위주체인 리더와 국민간의 심리자본 형성을 통한 동질성 회복, 신뢰형성, 공동체의식 강화 등 사회통합의 근간을 제공하는 새로운 인과적 관계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개혁을 통한 사회통합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즉, 정치개혁은 현재의 수직적 권력구조를 수평적으로 진화시켜 다양한 행위자들이 그들의 이익과 공공선을 위해 직접 참여하고 투입할 수 있는 핵심 통로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통합을 위한 경제 환경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즉, 부의 분배와 고용안정성 등과 같은 갈등요인을 단절시키는 것과 같은 경제적 측면의 조치는 경제민주화를 진척시키고 사회통합의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하기 때문이다. 셋째, 단절되어 있는 사회·문화 영역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개별적·집단적으로 단절된 이해집단을 융화할 수 있는 공동의 소통환경 조성 노력은 이타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사회와 문화를 통합적으로 재구조화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론의 장 형성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언론의 관심과 공정성을 기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넷째, 긍정적인 심리자본을 강화해야 한다. 즉, 개별적·집단적인 동질감의 형성은 사회의 긍정적인 정서를 함양하며, 상호신뢰의 관계 속에서 태도를 변화시키고, 사회통합의 행위로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유도하는 기제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제도는 개인과 집단의 합의적 문화와 신념의 형성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며, 이러한 과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심리적 변화를 이끌어 낸다. 미비한 제도의 확충과 개선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회통합의 기반인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각각의 주요 변수(즉, 정치개혁, 경제 환경 변화, 사회·문화 개선, 제도개선, 심리자본 강화)간의 상호연계성 유무를 찾기 위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실증분석에서 도출된 각각의 요인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스템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의 동태적인 변화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주요 국가들의 사회갈등의 발생 요인 및 해결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서론에서도 간단히 언급했듯이, 사회적 분열 및 갈등은 어느 특정국가의 이슈가 아닐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해결방안에 관련된 연구 또한 심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해외사례의 고찰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 량. (2013). “한국사회 세대갈등 현상의 원인과 해소방안에 관한 소고”. 『대한정치학회보』 제21집 3호.
- 강상훈. (2012). “노사갈등과 조직성과의 이론적 고찰을 통한 K복지단 노사관계 연구”. 『인터넷 비즈니스연구』 제13권 1호.
- 강원택. (2004). “남남갈등의 이념적 특성에 대한 경험적 분석”.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공배완. (2013). “테러확산의 문명 갈등적 요인: 기독교와 이슬람을 중심으로”. 『융합보안 논문지』 제13편 5호.
- 구자숙 · 한준 · 김명연. (1999). “세대격차와 갈등의 사회심리적 구조”. 『심리과학』 제8집 1호.
- 금창호 · 라휘문. (2010).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제도의 발전방향”. 『한국정책연구』 제10권 3호.
- 김강훈 · 김정기 · 박상만 역. (2012). 『긍정심리자본』. 렉스미디어.
- 김강훈 · 박상현. (2011). “인과지도 분석을 통한 디지털 세대의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참여 형태 연구”.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제12권 3호.
- 김도훈 · 문태훈 · 김동환. (2001). 『시스템 다이내믹스』. 대영문화사.
- 김도희. (2013). “환경갈등과 언론의 갈등조정 효과에 관한 정책적 함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축사건립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김동환. (2009). 『시스템 사고』. 선학사.
- 김무경. (2005). “한국인의 이념정향과 갈등”. 『사회과학연구』 제13집 2호.
- 김문조 · 김종길. (2007). “기술시대의 사회갈등: 진단과 대응”. 『담론201』 10(3).
- 김병진. (2013). “언론의 지역사회 문제 이슈화와 갈등관리 기능에 관한 연구: 부산대 제2캠퍼스 조성문제에 대한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동의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욱. (2009). 『위험, 위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현대 사회의 위험, 위기, 갈등에 대한 해석과 대응』.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윤태. (2007). “한국의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포용의 민주국가를 위하여”. 『기억과 전망』 제6호.
- 김재광. (2010). “사회갈등시설의 설치상의 문제점과 갈등완화 방안”. 『공법연구』 제38집 3호.
- 김정기 · 박상만 · 김강훈. (2011). “긍정적 심리자본과 사회통합: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을 중심으로”. 『정치 · 정보연구』 제14권 1호.
- 김종길. (2005). “접속시대의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21세기 한국메가트렌드시리즈Ⅱ』. 정보

통신연구원.

- 김중관. (2014). “MIPEX지수에 의한 다문화사회통합 정책의 비교분석”.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4권 1호.
- 김호기. (2007). “사회갈등과 거버넌스”. 『현대사회와 문화』 제1집 1호.
- 김희곤. (2013).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갈등의 관리 법제의 현황 및 과제”. 『국가법연구』 제9집 2호.
- 라휘문. (2011).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 제고 방안”. 『한국정책연구』 제11권 1호.
- 문태훈. (2012). “시스템 사고로 본 우리나라 사회갈등의 구조와 갈등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제13권 1호.
- 민무숙 · 김이선 · 주유선 · 이정연. (2013).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 양상을 통해 본 사회통합의 과제”. 『여성연구』 제85권 2호.
- 박경미. (2009). “정당정치와 사회갈등 재생산의 동학: 북아일랜드의 민족갈등을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제7권 1호.
- 박근수. (2005). “지방정부간 갈등에 있어서 언론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 박상만 · 김강훈. (2013). “인과지도 분석을 통한 긍정심리자본과 21세기 정치리더십의 재고찰”. 『한국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제14권 4호.
- _____. (2014). “사회통합을 위한 21세기 정치리더십 연구: 진실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73호.
- 박성복. (2012). “한국사회 정책갈등의 이념적 구조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 박세훈. (2013). “경쟁력 강화인가, 사회통합인가?: 서울시 외국인 정책 5년의 경험과 과제”. 『공간과 사회』 제23권 1호.
- 박찬욱. (2013). “사회통합의 방향: 한국정치의 과제”. 『저스티스』 통권 134-2호.
- 박충선 · 배나래. (2011). “다문화가족의 갈등양상 사례분석을 통한 지역사회통합방안 연구: 아시아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제14권 3호.
- 박현미. (2009). “한국의 노사갈등해결시스템 제안: 한국형 고충처리제도”. 『노동저널: 새로운 노동운동의 지평을 여는』 4월호.
- 백낙정. (2006). “남남갈등에서 한반도 선진사회로: 어디가 중도이며 어째서 변혁인가”. 『창작과 비평』 34-4.
- 변중현. (2013). “다문화사회에서의 갈등해결교육: 상호문화주의적 접근”. 『윤리교육연구』 제32집.
- 서기주. (2009). “사회갈등의 구조 및 특성에 관한 연구”. 『경찰연구논집』 제5호.

- 서문기. (2014).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와 계층갈등”. 『국제·지역연구』 제23권 1호.
- 서희석. (1998). “갈등당사자간 과학기술전문성의 균형 모색에 관한 연구: 제3자 개입을 통한 환경갈등 해결을 중심으로”. 『전북행정학보』 제12권.
- 손기호. (2010). ““질 높은 사회통합 정책목표와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 계획(2008-2012)을 중심으로”. 『2010한국지방정부학회 동계학술회의 자료집』.
- 신기현. (1999). “지역갈등 극복과 지역정치인의 역할: 지역균형발전을 중심으로”. 『제9회 한국 동서경제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 신승배. (2008). “한국비정규직·정규직 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사회갈등 의식차이”. 『분쟁 해결연구』 제6권 1호.
- 신윤창. (2010). “사회갈등의 원인구조와 해결방안: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동계 학술회의 논문집』.
- 심준섭·문태훈·허만형. (2013). “환경갈등 ADR 역량 비교분석: 한·미·일 3국간 비교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제27권 2호.
- 안광일. (1994). 『정부갈등관리론』. 대명출판사.
- 양희연. (1997). “환경정책에 있어서 환경운동과 언론의 영향력 분석: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조선대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수열. (2000). “동서지역갈등의 극복과 교류확대 방안”. 『한국동북아논총』 제17집.
- 오형석. (2013).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갈등과 외국인 범죄”. 『분쟁해결연구』 제11권 3호.
- 우혜숙. (2014).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정책의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인권복지연구』 제16호.
- 유병래. (2015). “세대갈등과 문화생활: 시민성 구현과 관련하여”. 『철학·사상·문화』 제19호.
- 유영옥. (2003). “남남이념갈등 극복을 위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27집.
- 유 욱. (2008). “북한 이탈주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공법연구』 제36집 4호.
- 유철규. (2006). 『국민경제해체의 위기구조』, 최장집편. “위기의 노동”. 후마니타스.
- 유해운·권영길·오창택. (1997). 『환경갈등과 님비이론』. 선학사.
- 윤용택. (2015). “환경갈등 예방을 위한 철학교육: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철학·사상·문화』 제19호.
- 윤인진. (2008). “공익의식과 사회갈등”. 『한국사회』 제9집 1호.
- 윤종한. (2013). “환경갈등해결방안으로서의 지속가능발전: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22권 2호.
- 이남영. (2008). “지역주의와 세대갈등: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9권 3호.
- 이부하. (2010). “사회통합과 헌법: 스멘트의 통합론을 분석하며”. 『세계헌법연구』 제16권 3호.

- 이용균. (2009).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 소외와 부인을 넘어 소통의 길로”. 『젠더리뷰』 기획특집 가을호.
- 이용재. (2011). “다문화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다문화개념의 전환: 분기하는 다양성과 동의형식의 문화개념”. 『사회과학연구』 제19집 2호.
- 이원태 · 김종길 · 김희연. (2012). “디지털 사회갈등의 새로운 양상과 사회통합의 정책방향”. 『방송통신정책연구』 12-진흥-004.
- 이정춘. (2000). “사회갈등과 방송의 사회적 기능”.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엄 발표자료』. 한국언론학회.
- 이환범 · 김태희. (2014). “우리나라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6권 2호.
- 이현승. (2010). “미국의 흑백복합인종 정체성의 결정 요인”. 『국제지역연구』 제19권 3호.
- 임도빈 · 허준영. (2010). “사회갈등의 확산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촛불시위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48권 4호.
- 임지영. (2011). “프랑스 노동시장에 나타난 이주민의 경제적 관계와 사회통합”. 『지중해 지역연구』 제13권 4호.
- 장용석 · 박명호 · 오완근. (2011). “지표를 통한 한국의 사회통합 분석: 국제사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 · 지역연구』 제20권 4호.
- 장우영. (2014). “이념갈등의 부침과 개혁방안 모색”. 『사회과학논총』 제13집.
- 장인호. (2014). “세계화시대에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 관련 법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제38권 1호.
- 전 훈. (2012). “공생과 상생을 위한 사회통합의 법적 과제”. 『외법연구』 제36권 3호.
- 정다운. (2006). “참여를 통한 사회갈등의 해결: 미국의 갈등해결 NGO 비교사례 연구”. 『시민사회와 NGO』 제4권 2호.
- 정성호. (1991). “세대갈등, 그 배경과 특징”. 『광장』 202호.
- 정정화. (2012). “공공갈등해결을 위한 ADR의 활성화방안 : 미국, 일본, 한국의 조정제도 비교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6권 2호.
- 정해조 · 이정욱. (2011). “민족의 개념이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에 끼치는 영향 연구: 독일,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연구』 제22집.
- 조국현. (2013). “18대 대통령선거에 따른 ‘세대갈등’ 담화분석”. 『독일문학』 제126집.
- 조승현 · 김경모 · 강윤철. (2006). “지방정부간 환경갈등 원인에 관한 연구: 영광쓰레기장 설치와 관련 고창군과 영광군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0권 1호.
- 조영기 · 이용환 · 최창현. (2011). “사회갈등 및 통합에 관한 연구: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 최돈민. (2009). “경쟁력제고와 사회통합을 위한 유럽연합의 평생학습전략과 시사점”. 『평생교육연구』 제15권 4호.
- 최승범. (2009). “평택미군기지를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의 전개과정과 이의 해소를 위한 도시거버넌스의 발전방향: 토지수용 전단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제9권 1호.
- 최영기. (2008). “사회통합이 먼저다”. 『선진화 정책연구』 제1권 2호.
- 최장집. (2005).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 최창현 · 백경구 · 주성돈. (2011). “사회갈등 및 통합에 관한 연구: 복잡성 이론, 특히 사회엔트로피이론 관점에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최충익 · 정주리. (2009). “Q방법론을 이용한 주민 환경갈등구조 분석: 흥천 골프장 개발사업을 사례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1권 3호.
- 최홍석. (2013). “한국의 지역갈등: 양상과 처방”. 『한국정책학회 기획세미나자료』.
- 한상운. (2012).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법제의 과제와 전망”. 『국가법연구』 제8집 2호.
-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2011). “언론 · 미디어가 한국사회의 갈등 구조에 미친 영향과 사회통합을 위한 언론 · 미디어의 역할”.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이념분과 2011년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한상진. (2013). “21세기 한국사회 변동전망과 사회통합의 방향”. 『저스티스』 통권 134-2호.
- 허병도. (2006). “노사갈등의 유형분석과 그 효율적 해결방안의 모색: 법적 · 윤리적 · 관행적 측면에서의 접근”. 『노동법학』 제23호.
- 허영식 · 정창화. (2012). “다문화사회에서 이주 · 사회통합정책 교차국가사례 비교분석: 독일, 프랑스,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EU연구』 제31호.
- 허철행 · 이희태 · 문유석 · 허용훈. (2012). “지역갈등의 원인과 해소방안: 동남권 신공항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16권 1호.
- 현진권. (2013). “사회통합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사회통합센터출범 기념 세미나자료집』. 한국경제연구원.
- Angell, Robert C. (1965). The sociology of human conflict, E.McNess(ed), *The nature of human conflic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Avolio, B. J., Gardner, W. L. (2005). Authentic leadership development: Getting to the root of positive forms of leadership. *The Leadership Quarterly* 16. pp. 315-334.
- Fink, C. F. (1968). Some conceptual difficulties in the theory of social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12. pp. 429-431.
- Funk, Carolyn L. (2001). “Process Performance: Public Reaction to Legislative Policy Debate”.

- in Hibbing, John R. and Theiss-Morse, Elizabeth, Eds, *What is It about Government That American Dislik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an, J. • To, H. Chan, E. (2006). “Reconsidering Social Cohesion: Development a Definition and Analytical Framework for Empirical Resear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75. 273-302.
- Corak, Miles. (2013). “Income Inequality, Equality of Opportunity, and Inter generational Mobility”. IZADP No. 7520.
- Daalder, H. (1974). “The Consociational Democracy Theme.” *World Politics*. Vol. 16. July.
- Davis, A. M.(1989). The logic behind the magic of mediation. *Negotiation Journal*,5(1).
- Fink, C. F. (1968). Some Conceptual Difficulties in the Theory of Social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12. Dec. 429-431.
- Hayden, J. Gregory. (2006). Policy making for a good society: the social fabric matrix approach to policy analysis and program evaluation. Springer.
- Hibbing, John R. and Theiss-Morse, Elizabeth. (2002), *Stealth Democracy: American’s Belief about How Government Should Work*.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ymlicka, W (ed.). 2005a. The Rights of Minority Culture. Oxford University Press.
- Kymlicka, W (ed.). 2005b. Multicultural Citizenship. Oxford: Clarendon Press. Kymlicka, W. and B. He (ed.). 2005, *Multiculturalism in Asia*. Oxford University Press.
- Kim Gang-Hoon. (2009), “An Empirical Study of the Type of Democratic Process Citizens Really Want: the case of Sou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49, No.6: 177-202.
- Menkel-Meadow, C. J. (2007). *Mediation: Concepts and models*. Aspenpublisher.
- Oberschall, A. (1978). Theories of social conflict, *Annual Reviews Sociology* 4, pp. 291-315.
- OECD. (2013). Strengthening Social Cohesion in Korea.
- Peterson, C. & Seligman, M.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canlon K.M. (2005). Primer on developments in mediation confidentiality. In Bleemer, R., *Mediation: approaches and insights*. Juris Publishing, Inc. pp. 241-248.
- Steiner, J. 1981. “The Consociational Theory and Beyond.” *Comparative Politics* Vol 13. November.
- Wilkinson & Pikett. (2009). *The Spirit Level: Why More Equal Societies Almost Always Do Better*. Allen Lane.

▶ 접수일 : 2015. 8. 31. / 수정일 : 2015. 12. 4. / 게재확정일 : 2015. 12. 24.